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2014. 12. 04

조사연구위원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목 차

Ⅰ. 발표자 소개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Ⅲ. 건설기술진흥법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Ⅳ. 결 언
오재화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설사업관리본부

-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사업관리사
- 건설VE전문가(CVP)
- 국토부장관 표창장 수상
- 건설교통진흥원 신기술 및 R&D 평가위원
- 한국신기술협회 신기술심의위원
- 인천광역시 설계VE검토 외부위원
- 대전국토관리청 설계VE검토 외부위원
- SH공사 12기 건설디자인위원회 위원
- 한국CM협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Ⅰ. 사업분야

사업영역 Field of Business

건설사업관리
에너지·연구개발
도시환경
엔지니어링·안전진단
산업디자인·인테리어
글로벌비즈니스

Total Management

언제나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업

건설사업 모든 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토탈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
한차원 높은 만족감 선사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 사유
설계·감리·CM등 복잡한 업역 체계를 단일화 함으로써 기술탐야 간 교류가 가능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
(관련산업의 관리 & 규제 중심에서 진흥 & 지원 중심으로 전환)

추진 경과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 선진화 방안 의견수렴 .............. ‘11.03 ~ 07.
건기법 전부개정안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11. 12.
건기법 전부개정 .................................................. ‘13. 05. 22. (‘14. 05. 23. 시행)
건기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 ................................. ‘13. 05. 22. (‘14. 05. 23. 시행)
건기법 하위행정규칙(고시 등) 제·개정 ...................... ‘13. 05. 22 (‘14. 05. 23 시행)
## II.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법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개정 내용</th>
<th>해당조문</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기술자 관리체계</td>
<td>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게, 하향 조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등급 인정</td>
<td>영 제4조 별표1, 부칙 제9조</td>
</tr>
<tr>
<td>건설기술자 관리체계</td>
<td>감리원 등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 최초교육을 업무수행 전 이수하도록 내실화</td>
<td>영 제42조 별표3</td>
</tr>
<tr>
<td>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td>
<td>전문분야별로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td>
<td>영 제44조 별표5</td>
</tr>
<tr>
<td>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td>
<td>설계·사업관리는 인력 5<del>15명, 사무실, 자본금 0.5</del>2.0 억 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존요건 유지</td>
<td>영 별표5</td>
</tr>
<tr>
<td>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td>
<td>기존 용역업자는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재신고</td>
<td>영 부칙 제11조 규칙 부칙 제6조</td>
</tr>
</tbody>
</table>
## 법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개정 내용</th>
<th>해당조문</th>
</tr>
</thead>
<tbody>
<tr>
<td>설설사업관리 시행</td>
<td>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를 기존 책임감리 대상공사(200억 이상 22개 공종)로 함</td>
<td>영 제55조 별표7</td>
</tr>
<tr>
<td></td>
<td>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함</td>
<td>영 제59조</td>
</tr>
<tr>
<td></td>
<td>저가낙찰 현장(공사비 70%미만)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추가 배치 의무화</td>
<td>영 제60조</td>
</tr>
<tr>
<td>설설공사 안전관리 강화</td>
<td>시설공정 1·2급 시설물(100m 이상 교량 등)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td>
<td>영 제98조</td>
</tr>
<tr>
<td></td>
<td>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대상 시설물을 확대 (지하 10m 굴착공사 등 ‘영 제98조제1항’ 건설공사)</td>
<td>영 제100조</td>
</tr>
</tbody>
</table>
## II.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법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주요 개정 내용</th>
<th>해당조문</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기술용역 업자 선정</td>
<td>감리·CM을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건설사업관리 PQ로 통합</td>
<td>규칙 제28조 별표3</td>
</tr>
<tr>
<td>건설업자 등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시 용역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함</td>
<td>영 제51조 규칙 제28조</td>
<td></td>
</tr>
<tr>
<td>「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축설계업자 선정과 관련 된 PQ 등 규정을 삭제</td>
<td>영 제52조 규칙 제28조</td>
<td></td>
</tr>
<tr>
<td>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승인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td>
<td>규칙 제31조</td>
<td></td>
</tr>
</tbody>
</table>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1. 건설기술용역업 통합 및 관리체계 일원화

◆ 종합적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회사’ 등으로 구분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업역통합에 따라 등록관리, 업무정지 등을 건설기술용역업 단일체계로 일원화, 건설기술용역업을 종합(1), 설계·사업관리(3), 품질검사(10) 등 전문분야로 구분
  ※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일반, 토목, 건축, 특수(7종))

- 업종별(설계·사업관리)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해당용역의 업무만 영업 정지를 부과하도록 조치 (*벌점은 통합 부과)

- 설계 등 용역업(계획·조사·설계) 등록 시 “엔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신고자 이어야함.

 건진법 부칙(13조)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들도 1년 이내에 재등록 하여야 함.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2 건설기술용역업 실적관리 통합

◆ 업역 통합에 따라 공공공사의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을 발주청에서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토록 규정

- 민간감리(주택법·건축법) 실적도 현행과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에서 계약내용 통보(영 제45조제2항)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 및 실적내용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영 제45조제6항)

*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CEMS) 개발, 9월부터 통합「건설기술용역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통한 온라인 운영·활용

관리절차: 용역업체(입력) → 관리협회(입력내용 확인) → (발주청 승인 및 조회)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3. 건설기술자 통합 및 등급체계 개선

◆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분리된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등급체계 개선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활용하여 경력·자격·학력의 종합평가로 등급 산정
○ 건설기술자로의 통합에 따라, 기술자 등급 재산정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토록 경과규정 마련

<table>
<thead>
<tr>
<th>기 존</th>
<th>수석감리사</th>
<th>감리사</th>
<th>감리사보</th>
<th>검측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현 행</td>
<td>특급기술자</td>
<td>고급기술자</td>
<td>중급기술자</td>
<td>초급기술자</td>
</tr>
</tbody>
</table>

○ 기술자 직무분야 중 활용도가 낮은 분야는 폐지 또는 통합(직무 15→10, 전문 55→44)
  금융·기획·마케팅 및 정보처리 등의 분야를 신설하여 기술분야 확대

영 제4조 별표1, 부칙 제9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및 행정제재 단일화

◆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으로 구분된 교육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업무분야별 행정제재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영 제42조제2항 별표3)

* 최초교육을 업무수행 전 이수하도록 내실화(종전, 기술자 최초 3년 이내)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기준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되, 위반행위는 경력증 대여 및 명령불응 등으로 최소화

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중
## 5.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이수 시간 등(영 별표3)

<table>
<thead>
<tr>
<th>교육종류</th>
<th>기술자 구분</th>
<th>설계·시공, 품질관리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1) 최초교육</td>
<td>기본교육: 70시간 이상</td>
<td>기본교육: 35시간 이상</td>
</tr>
<tr>
<td></td>
<td>전문교육: 특·고급 70시간, 중·초급 35시간 이상</td>
<td>전문교육: 35시간 이상</td>
</tr>
<tr>
<td>2) 승급교육</td>
<td>전문교육: 특·고급 70시간, 중·초급 35시간 이상</td>
<td>전문교육: 35시간 이상</td>
</tr>
<tr>
<td>3) 계속교육</td>
<td>전문교육: 특·고급 70시간, 중·초급 35시간 이상</td>
<td>전문교육: 35시간 이상</td>
</tr>
<tr>
<td>4) 안전관리교육</td>
<td>전문교육: 16시간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계
- 건설사업관리교육 이수 시 설계·시공 건설기술자 교육 면제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시 계속교육 면제
- 교육훈련의 연기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년간 유예
  (단, 별도 사유 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 하여야 함)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6. 감리와 CM의 건설사업관리로의 통합

◆ 시공단계의 감리업무를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고 업무범위는 발주청이 선택하도록 규정

* 업무범위(6단계) : 설계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 후 단계

시장단계는 “건설사업관리”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고, 발주청이 기본구상단계에서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하도록 규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명칭 변경

<table>
<thead>
<tr>
<th>기존</th>
<th>책임감리원</th>
<th>보조감리원</th>
<th>기술지원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현행</td>
<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td>
<td>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td>
<td>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td>
</tr>
</tbody>
</table>

기존 책임감리 의무대상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저가현장 기술자 추가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 개정

영 제55조, 59조, 60조(대상공사 및 업무 범위 등)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7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개선

◆ 감리와 CM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하고, 기술자 평가배점 상향 조정

*업체선정은 고시금액 이상 20억 미만은 PQ만 평가하고 20억 이상은 PQ+TP를 평가하되, 시공단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PQ+SOQ 평가

* (구, 평가방법) 20억 이상 용역에 대하여 PQ평가 후, CM은 TP평가, 감리는 SOQ 평가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참여기술자의 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PQ평가 시, 기술자의 평가배점을 50점 → 60점으로 상향 조정

영 제52조, 규칙 제28조(용역업자 등의 선정)
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양성화 및 종합평가제 도입

◆ 건설기술용역업의 대·중소업체 공생협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양성화 및 종합평가제도 도입

하도급 관리지침
정부의 국정목표인 중소업체 진흥책의 하나로, 하도급업체의 실적 및 기술자 경력을 제대로 관리하여 건설한 용역업체로 육성하고자 함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전법 개정에 따른 용역 업체를 육성지원하여 우수 용역업체 양성 및 고품질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하도급 관리지침” 및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 시행(14.5.23)
III. 진흥법 개정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Ⅲ.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쟁점사항 (1)**
[국회CM포럼/ 건설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11.18)

**제도 및 정책적 측면 [건설산업기본법]**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등 CM 발주방식 다양화 곤란
- 건설기술자 이외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 민간건설시장 CM 활용 체계 미흡/ 주택법(재건축 등), 건축법에 CM 제도 도입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 CM 전문가 그룹 354명의 응답 내용]
- CM 활성화를 위한 CM at Risk 등 발주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필요하다 (65.5%)
- 건설기술자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리시스템 필요성/ 필요 (61.0%) 꼭 필요 (25.4%)
- 민간분야 CM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건축법에 CM 제도 도입/ 필요하다 (31.1%)
  건설산업기본법 내 CM을 보완함/ 필요하다 (44.6%)
- 건설기술진흥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 여부/ 적합치 않다 (32.2%) 잘 모른다 (36.3%)
III.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확명사항 (2) [국회CM포럼/ 건설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11.18)

제도 및 정책적 측면 [건설기술진흥법]

- CM을 공공공사에 한하여 건설기술로 한정함
- 수행방식은 설계 또는 시공을 포함하여 CM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제함
- 종전의 감리 수준 CM의 일반화 우려 - 감리를 CM으로 단순 용어만 변경하여 혼돈초래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 CM 전문가 그룹 354명의 응답 내용]

- 시공책임형 CM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시범사업 & 제도개선 / 필요하다 (28.7%)
- 건설기술진흥법의 CM용어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 전 단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일(69.4%)
- 건설기술진흥법에 감리를 CM에 포함 일원화로 하향평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면 그 이유/ CM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종전 시공단계의 감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77.7%)
- 건설기술진흥법에 CM사업참여자 확대의 필요성/ 필요하다(52.8%) 반드시 필요(19.8%)
Ⅲ.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국회CM포럼/ 건설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11.18)

수요자(발주자) 및 공급자(CM.r) 측면

- 발주자의 CM에 대한 이해 & 신뢰 부족/ 권한 축소, 업무침해라는 인식
- 종전의 시공단계 감리수준의 CM만 발주하려는 경향 상존 (특히 토목분야)
- CM 전문가 역량 미흡 & CM 영역 확대를 위한 기술력, 정보력, 자금력 등 부족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 CM사업자 및 CM기술자의 역량 선진국과 비교/ 낮은 수준 (51.1%) 보통 (31.6%)
- CM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느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 기획,계약,클레임 (66.1%)
- 우리나라 CM사업자 및 CM기술자의 역량 선진국과 비교시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
  설계전 단계(48.6%) 설계단계(16.7%) 전 단계(25.7%)
- 해외CM 진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공기업, 대형건설기업과 공동진출 필요 (36.7%)
“규제를 진흥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의 규정은 물론 개념 자체가 불분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39조 1항에서 감독권한대행업무 등 건설사업관리는 종전의 책임감리업무로 이를 CM 활성화로 보기 어렵고, CM 활성화를 위해선 CM 업무범위 별도 규정이 요구되는 만큼 법체계의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채향석 법제관)

“건설산업 패러다임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곧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계약법의 문제 점을 개선하는 등 최고가치를 위해 최저가 낙찰 제도인 입찰 발주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

“한 국가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과 기술자가 탄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CM의 업무 역할과 대가의 격차 해소를 비롯 CM이 제공할 수 있는 효과와 발주자의 CM에 대한 인식 격차 해소, CM at Risk와 CM for Fee의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
건진법 시행 6개월 만에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문제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산업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진법은 규제 강화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 (간삼 박용호 부사장)

"CM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을 미흡하고, CM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에도 소홀한 면이 있으며, 우리나라 CM업체도 건설공사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하며 "CM은 건설기술뿐 아니라 법무·행정·금융·세무 등 모든 업무가 동원돼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 활동"이므로 "시공책임형 CM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CM실적 관리를 체계화 하는 등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함. (주제발표자 이학기 교수)
Ⅳ. 결 언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원망만 하지 말자!

◆ 선진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것으로 정착시켜 가는데 따른 과도기적 오류 인정함.

   모든 법과 규정은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수정, 보완되어 왔음.
   - 우선, CM 불모지에 선진 제도를 도입, 적용하기 위해 누가 주체로 참여 하였는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선진화 방안 의견수렴 과정에 CM전문가들이 한 일은?
   - 6개월간 시행효과-비판?? (부득이 분야별로 다른 관점과 이견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 각계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국내 기술용역의 선진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
   - 금번 국회 CM포럼에서 다수의 공동적인 문제 제기/ 대책 방안도 많이 내 놓았음.
   - 지적된 문제점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TF팀 구성 필요
   - 정부와 학계, 업계, 언론의 분야별 전문가가 열린 사고로 내실있는 제도 개선에 동참해야!

<건설기술진흥법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감사합니다.

[Q & A]

조사연구위원회